

2025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주요정책 부문)

2026. 1.

법제처

1. 평가개요

(1) 중점 평가방향

□ 국민주권정부 국정과제, 2025년 법제처 중점 추진 업무 및 대통령 지시사항 등을 고려하여 성과관리 시행계획 관리과제 평가 실시

○ 핵심과제 선정 및 집중관리

- 국정과제와의 연관성 등을 고려한 ‘핵심과제’ 선정, 추진성과에 따라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평가항목 설정

* (핵심과제) 2. 입법전략 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국정입법 총괄·관리
6. 민생 안정과 공정·상생을 위한 법령정비

○ 적극성·대표성 있는 성과지표 우대

- 적극성이 인정되고, 결과 중심의 대표성 있는 성과지표 설정 시 ‘성과지표 달성도’에서 높은 점수 부여
- (적극성) 성과지표 목표치가 과거 3년 실적 평균의 120% 이상 또는 직전년도 110% 이상일 경우 적극성 인정
- (난이도·대표성) 결과지표 여부, 목표 달성에 투입되는 노력을 고려하여 난이도를 평가하고, 관리과제의 핵심적인 정책내용을 반영한 지표 설정 시 평가 우대

○ 미래 성장동력 확보 및 민생 안정 기여 노력 우대

- 국민주권정부 국정기조에 맞추어 미래 성장동력 확보 및 민생 안정에 기여한 경우 평가에서 우대받을 수 있도록 ‘주요 정부시책 기여도’ 가점항목의 배점 상향

○ 자체평가 결과 미흡·부진과제 관리 강화

- '24년 자체평가 시 개선·보완 필요의견과 미흡·부진과제의 경우 심층분석 결과를 '25년 성과관리 시행계획 등에 충실히 반영했는지 등을 평가하여 결과 환류 노력

(2) 평가추진 개요

□ 평가추진 체계

- 법제처 자체평가위원회: 외부(14명) · 내부(4명) 위원 18명으로 구성, 법제처 성과관리 등 검토 · 평가
- 평가지원팀(기획재정담당관실 및 과제담당자): 자체평가 대상 이행실적 자체점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등 평가업무 수행

□ 평가방법



- 상반기 실적 자체점검(7월)* 및 매월(9~12월) 추진실적 점검 실시
 - * 새 정부 국정과제 수립 중 고려 실적 점검은 의무가 아니나, 자체점검 실시 및 기관장 보고
- 자체평가위원 대상 부서별 ‘사업설명회’ 개최(‘25. 12. 2.)
- 자체평가위원회 사전 서면심의 실시(‘25. 12. 23. ~ ‘26. 1. 2.)
 - 주요정책 1·2소위 및 행정관리역량 특별소위 구성 · 운영
- ❶일반 국민, ❷법제처 정책 적극 관심층 ❸외부 전문가를 대상으로 국민 체감도 조사 실시(‘25. 12. 23. ~ ‘26. 1. 2.)
 - * 국조실 · 행정연 합동 컨설팅 의견 반영(조사대상 다양화로 객관성 확보 필요)
- 서면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자체평가위원회 최종심의(‘26. 1. 14.)
- 자체평가위원회 최종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진행(‘26. 1. 15. ~ 16.) 및 최종결과 확정

□ 평가대상 및 평가지표

- 평가대상: 「2025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상 관리과제 15개
- 평가지표: 정책활동 단계에 따라 3개 항목·가감점 등 11개 지표로 평가

평가항목	평가지표	측정방법(측정기준)	배점
정책형성 (22점)	정책목표 및 수단의 적절성(10점)	정책목표의 상위목표와의 연계성·구체성 및 적절성	5점
		정책수단의 적절성	5점
	분석·의견수렴 충실성(12점)	계획 수립 시 정책효과·장단점 분석의 충실성	6점
		전문가·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의 충실성	6점
정책집행 (18점)	추진일정의 적절성 및 충실성(4점)	추진일정의 구체성·적절성	2점
		추진일정 준수 여부	2점
	상황변화 대응성(6점)	모니터링 실시 여부 및 정책여건 변화에 따른 대응의 적절성	6점
	국민·관계기관 등과의 소통·협업 노력(8점)	국민·관련기관과의 연계 및 협조체제 구축 및 운영 여부	8점
정책성과 (60점)	성과지표 달성도 (35점)	성과지표의 대표성	5점
		성과지표의 난이도	10점
		성과지표 목표치의 적극성 및 달성도	20점
	정책효과 발생 여부 (25점)	정책효과 발생 수준 및 상위목표 달성에 기여한 정도	15점
		자체평가 결과 환류의 충실성	10점
가점 (+6점)	주요 정부시책 기여도	국정과제, 정부업무평가 등에 대한 기여도	+4점
	핵심과제 추진성과	‘핵심과제’로 선정된 과제의 추진성과	+1점
	다부처 협업 노력	다부처 협업 과제 추진성과	+1점
감점 (△1점)	자료제출의 적시성	평가 자료 제출 기한 지연 시 (△0.1/일, 최대 △1점)	△1점

< '24년 평가항목 >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정책형성 (22)	1-1. 정책목표 및 수단의 적절성	10
	1-2. 분석·의견수렴 충실성	12
정책집행 (18)	2-1. 추진일정의 적절성·충실성	4
	2-2. 상황변화 대응성	6
	2-3. 국민·관계기관 등과의 소통·협업 노력	8
정책성과 (60)	3-1. 성과지표 달성도	35
	3-2. 정책효과 발생 여부	25
가점 (+5)	4-1. 주요 정부 시책 기여도	+3
	4-2. 핵심 민생과제 추진성과	+1
	4-3. 협업과제 추진성과	+1

< '25년 평가항목 >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비고
정책형성 (22)	1-1. 정책목표 및 수단의 적절성	10	-
	1-2. 분석·의견수렴 충실성	12	-
정책집행 (18)	2-1. 추진일정의 적절성·충실성	4	-
	2-2. 상황변화 대응성	6	-
	2-3. 국민·관계기관 등과의 소통·협업 노력	8	-
정책성과 (60)	3-1. 성과지표 달성도	35	-
	3-2. 정책효과 발생 여부	25	-
가점 (+6) 감점 (△1)	4-1. 주요 정부 시책 기여도	+4	가점 확대
	4-2. 핵심과제 추진성과	+1	-
	4-3. 다부처 협업 노력	+1	범위 확대*
	4-4. 자료제출의 적시성	△1	감점 신설

* ('24년) 특정평가 협업과제만 부여 가능 → ('25년) 다부처 협업으로 가시적·실질적 성과가 있는 경우만 부여 가능

2. 평가결과

(1) 총 평

□ '25년도 총 21개 국·과(팀) 중 17개 국·과(팀)의 15개 관리과제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25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기준)

- 매우 우수 1개(5%), 우수 2개(15%), 다소 우수 2개(15%), 보통 4개(30%), 다소 미흡 3개(15%), 미흡 2개(15%), 부진 1개(5%)로 나타남
- 우수 이상 과제는 '입법전략 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국정입법 총괄·관리(매우 우수)' 등이며, 미흡 이하 과제는 '공무원 등의 법제 전문성 제고를 위한 맞춤형 교육 강화(부진)' 등인 것으로 평가됨
- 핵심과제로 선정한 2개 과제는 우수·다소 우수 등급으로 평가, 국민주권정부 국정성과 창출에 기여

* 2. 입법전략 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국정입법 총괄·관리(매우 우수, 1등급)

6. 민생 안정과 공정·상생을 위한 법령정비(다소 우수, 3등급)

□ 총 15개 관리과제의 27개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달성도 분석 결과, 성과지표 목표치에 대한 평균 달성률*은 96.3%, 상승 추세로 판단

* 평균 달성률: 100% 이상 달성 성과지표 개수(26) / 전체 성과지표 개수(27) × 100

- 27개 성과지표 중 26개의 지표는 목표치를 충실히 달성하였으나, 1개 지표는 목표치를 근소하게 달성하지 못함
- 구체적인 관리과제별 목표치 대비 실적비율 평균값은, 초과달성(120%이상, 6개 지표) 133%, 달성(100%~119%, 20개 지표) 104%, 미달성(100%미만, 1개 지표) 99.8%로 분석됨

구분	23년도	24년도	25년도
성과목표 평균 달성률	95.2%	100%	96.3%
총 성과지표 개수	42개	32개	27개
총 관리과제 수	24개	19개	15개
목표달성 성과지표 수	40개(△2개)	32개	26개(△1개)

- 성과 목표치를 미달성한 지표는 총 1개로, 'AI 기반의 혁신적 국가법령정보서비스 제공'의 성과지표임
- 성과 목표치 미달성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9. 26.)로 인한 26일 간의 서비스 중단 등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됨.

지표명	목표 (A)	실적 (B)	달성 도 (B/A)	미달성 원인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용자 만족도	89.0 점	88.8 점	99.8 %	- 국가법령정보센터는 지능형 AI 서비스 도입, 법령정보 콘텐츠 확대, 챗봇 서비스 및 전자 점자 서비스 등의 기능 개선을 통해 이미 높은 수준의 만족도를 제공하고 있음 - 다만, 서비스 만족도가 높은 만큼 장애('25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등)나 작은 오류와 불편함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화재 발생 前 만족도: 89.2점 화재 발생 後 만족도: 83.1점(△6.1점)

(2) 주요성과

- ‘입법전략 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국정입법 총괄·관리’ 등 3개 과제(관리과제 2·8·10)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인 것으로 평가

입법전략 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국정입법 총괄·관리(I-1-②)

【 주요성과 】

- 국정과제 입법 추진 체계 구축
 - 국정입법 장애요인 조기 파악하여 법안별 맞춤형 입법전략 검토·제시하고, 당·정·대 상시 소통을 통한 체계적·국정입법 추진을 위해 법제처 내 국정입법상황실 설치
 - 새 정부 국정과제의 체계적 실현을 위한 입법 로드맵 수립과 법안 신속 처리 전략을 마련한 「5개년 국정과제 입법계획」 수립·보고
 - 당·정·대 국정입법협의체를 구성하여 국정과제 입법전략 마련 및 행정 법안 집중 지원
- 신속한 법제 지원을 통한 국정성과 조기 창출 뒷받침
 - '25년 국정입법 과제 총 177건(법률 112건, 하위법령 65건) 중 민생·경제 관련 법안 등 총 54건(법률 31건, 하위법령 24건)을 「국정과제 입법계획」 대비 조기 제출, 제·개정 완료

【 달성원인 】

- 국정입법 현황 등 관계부처 협의체 보고 및 국정입법 적극 지원
 - 국무·차관회의, 국조실 국정과제점검협의체, 당·정·대 국정입법협의체 등 주요 협의체를 통해 입법실적 점검 및 부처 입법노력·지연사유 등 종합 보고(34회), 입법 추진상황 공유·입법 독려
 - 국민통합, 산업·금융 혁신, 균형성장, 노동자·사회적 약자 보호 등 정부 주요정책의 신속한 법제화 지원을 통해 국정과제 법안 총 177건 입법 완료(법률 77건, 하위법령 40건)

미래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법제 개선(II-2-①)

【 주요성과 】

-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규제법제 혁신
 - 「인공지능기본법」(‘26. 1. 시행)이 개별 법령에 미칠 영향 분석, AI 활용 촉진 법적 토대 구축
 - 육아돌봄 기간의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한 인적 기준 정비 등 저출생 사회 대응 법제 마련
 - 산업현장 중대재해 근절 및 자연재난 종합대응 시스템 구축 등의 국가적 현안 법제적 지원
- 미래사회 발전 견인을 위한 행정법제 혁신
 - 디지털 및 AI 기반의 행정 프로세스 촉진을 위한 ‘종이 없는 행정’ 2차 과제 정비 추진
 - 저출생 시대에 대비하여 ‘지역 활성화와 연계된 폐교 활용방안’ 등 법제도의 입법 효과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방안 도출

【 달성원인 】

- 신기술·신산업 등 미래를 위한 법제도 마련 지원
 - 새 정부 국정과제의 적기 이행을 위해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의 입안 단계부터 민관정비단 참여, 자문·검토 등 법제 지원(총 27개 조문, 59건)
 - 미래 기술이 산업구조는 물론, 사회구조 전반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법제 혁신 방안에 대한 선제적 연구 추진(인공지능 관련 법령 간 정합성 검토 및 법제 개선 등)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사용 근로자도 ‘상시 근무’에 포함되도록 총 23건 법령 정비

AI 기반의 혁신적 국가법령정보서비스 제공(Ⅲ-1-①)

【 주요성과 】

- 지능형 법령검색시스템 고도화
 - 정확한 법령용어를 몰라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단어나 문장으로 법령을 찾아볼 수 있는 지능형 법령검색시스템 고도화(AI 검색 서비스·연관 법령 보기), 이용자 만족도 83.7% 달성
- 국민의 법 접근성 제고 및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법령정보 제공
 - 전자점자 서비스 확대(약 8,000건 점자 전용 파일 제공), 조약 국문·영문 함께보기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적극 개선을 통해 웹(PC)·모바일 앱 접근성 품질인증 2년 연속 획득
 - 기관별 산재된 교육부 등 31개 기관의 법령해석과 특별행정심판 재결례, 지방세 판례 등 5만여 건의 정보를 AI 활용 및 데이터 친화적 형태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통합·제공

【 달성원인 】

- 지능형 법령검색 이용 활성화 유도
 - 국민이 검색창에 입력한 질문에서 주요 키워드 추출·범주를 나눈 후 법조문을 그림으로 찾아가는 AI 검색 서비스와 검색 결과 관련된 법령(상·하위관계 등)을 한 화면에 시각화하여 제공
 - 교통, 복지, 근로 등 18개 생활분야별 FAQ 300개 추가 제공, 지능형 법령검색 이용 활성화 유도
-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품질 강화 적극 노력
 - 설문조사·국민제안을 통한 국민(정보취약계층 포함) 의견 상시 수렴, 시각장애인·일반국민으로 구성된 모니터링단 운영 등을 통해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선 필요사항 접수 및 서비스 반영
 - 정부 내 협업 추진, 중앙행정기관 보유 하급심 판례 및 국가기관 결정선례 공개 확대

(3) 개선·보완 사항

- ‘공무원 등의 법제 전문성 제고를 위한 맞춤형 교육 강화’ 등 3개 과제(관리과제 1·5·13)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
 - (☞관리과제 1) 「성과관리 시행계획」 수립 시 SWOT분석 결과 반영 미흡, 성과지표(통합입법예고시스템 처리의견 처리율)의 난이도 낮음
 - (☞관리과제 5) 「성과관리 시행계획」 수립 시 과제추진 계획의 구체성 미흡, 성과지표(법령해석 요청차의 의견청취 건수) 난이도 낮음
 - (☞관리과제 13) 법제교육 만족도 조사의 보완·개선의견 환류 체계 부재, 집합·사이버교육 난이도를 고려하여 성과지표 개선 필요
- 「성과관리 시행계획」 수립 단계부터 SWOT 분석 결과에 따른 대응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추진계획의 구체성 제고 필요
 - 아울러, 성과지표 설정 시 난이도 등을 충실하게 검토하여 내실 있는 성과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 필요

(4) 평가결과 종합

관리과제명	자체평가결과 (평가등급명)
1. 정부입법에 대한 총괄·관리 강화	6등급 (미흡)
2. 입법전략 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국정입법 총괄·관리	1등급 (매우 우수)
3.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법제지원 확대	4등급 (보통)
4. 속도감 있는 정책 입법을 위한 법제지원	5등급 (다소 미흡)
5. 법령해석 제도를 통한 현장 중심의 적극적 법 집행 지원	6등급 (미흡)
6. 민생 안정과 공정·상생을 위한 법령정비	3등급 (다소 우수)
7. 위법·부당하거나 불합리한 행정규칙 정비	4등급 (보통)
8. 미래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법제 개선	2등급 (우수)
9. 자치입법권 보장 법령정비 및 자치법제 역량 강화 지원	4등급 (보통)
10. AI 기반의 혁신적 국가법령정보서비스 제공	2등급 (우수)
11. 생활법령·조례 서비스를 통한 생활밀착형 법령정보 제공	4등급 (보통)
12. 어려운 용어·문장 정비 및 시각화를 통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5등급 (다소 미흡)
13. 공무원 등의 법제 전문성 제고를 위한 맞춤형 교육 강화	7등급 (부진)
14. 수출기업 맞춤형 해외 법령정보 제공	5등급 (다소 미흡)
15. 외국 기관과의 법제 교류·개발협력 강화	3등급 (다소 우수)

3. 관리과제별 세부 평가결과 및 조치계획

1

정부입법에 대한 총괄·관리 강화

6등급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새 정부 정책과제 조기 완수를 위해 정부입법 수정계획 수립, 입법예고 기간 단축 등 속도감 있는 정부입법 추진
 - 총 93건의 법안을 국회 제출 완료하여 정부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입법적으로 뒷받침
- 국민이 제출한 입법의견 중 각 부처의 장기 미답변 입법의견에 대해 조속한 처리 독려 등으로 입법의견 처리율 상승
 - ※ 입법예고 의견 처리율 추이: ('24) 95.8% → ('25) 96.9%(1.1%p 상승)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고로 인한 통합입법예고센터 장애 상황에서 입법예고 대체 창구 마련, 입법예고 단축 협의 등 원활한 입법절차 적극 지원
- 법률에서 구체적인 요건, 기준, 절차 등을 위임한 하위법령 제때 마련 대상 309건을 적극 관리(신속 심사 등)하여 모두 제때 마련 완료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성과관리 시행계획」 수립 시 SWOT 분석을 통해 정책환경 및 장단점 분석을 실시하였으나, 해당 분석 결과가 계획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명확히 제시되지 않음
- 성과지표 중 '통합입법예고시스템 제출의견 처리율'의 측정산식 중 '처리'의 기준이 단순 '제출의견' 건수로 제시되는 것은 난이도가 낮다고 볼 수 있음

☐ 개선보완 필요사항

- SWOT 분석 결과를 「성과관리 시행계획」 등에 충실히 반영하고, 성과지표의 난이도 제고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목표 및 수단의 적절성	중	· 신속한 입법화 지원이라는 정책목표는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와 연계성이 높음 · 정부입법계획 수립, 입법예고 의견수렴 관리, 하위법령 제때 마련 대상 책임관리, 법제 업무 평가 등은 정책 수단으로 적절함
2. 분석·의견수렴 충실성	중	· 정부입법계획 분석, 새 정부 주요 정책 분석, 법제업무평가결과 분석, SWOT 분석 등이 제시되고 있으나, SWOT 분석 결과가 계획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명확하지 않음
3. 추진일정의 적절성·충실성	상	· 새 정부 수립으로 계획 수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일정을 적절히 수립하고 수정함
4. 상황변화 대응성	상	· 새 정부의 정책 방향 반영이 적절하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업무시스템 마비에도 적절히 대응함
5. 국민·관계기관 등과의 소통·협업 노력	중	· 하위법령 현황을 격주로 차관회의에 보고하며 범부처적 이행 동력을 확보함
6. 성과지표 달성도	하	· ‘제때마련율’과 ‘제출의견 처리율’은 법제처 총괄관리 기능을 대표하는 핵심지표로 판단됨 · 제출의견 처리율의 난이도는 낮음
7. 정책효과 발생 여부	중	· 정부입법의 총괄 관리에 충실하며, 개선보완사항을 잘 반영함 · 하위법령의 적기 마련을 통해 정부 주요 정책이 현장에서 즉시 집행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함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국정입법상황실을 중심으로 새 정부 국정과제의 체계적 실현을 위한 입법 로드맵 수립과 법안 신속 처리 전략을 마련한 「5개년 국정과제 입법계획」 수립·보고
- 입법 진행상황 실시간 점검 등을 통해 입법계획 대비 지연 우려 등 장애요인 파악 및 선제적 법제 지원 실시
- 국민통합, 산업·금융 혁신, 균형성장, 노동자·사회적 약자 보호 등 정부 주요정책의 신속한 법제화 지원을 통해 국정성과 조기 창출 뒷받침
- * 국정과제 법안 총 117건 입법 완료(법률 77건, 하위법령 40건)
- '25년 국정입법 과제 총 177건(법률 112건, 하위법령 65건) 중 민생·경제 관련 법안 등 총 54건(법률 31건, 하위법령 24건)을 「국정과제 입법계획」 대비 조기 제출, 제·개정 완료
- 국정과제의 성공적인 법제화를 위해 당·정·대 국정입법협의체 구성, 국정과제 입법전략 마련 및 쟁점 법안 등 집중 지원 실시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성과지표인 '주요 정책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한 관계부처 협의체 보고 건수'는 대표성 다소 부족
- 지표 변경 등을 통해 성과지표 대표성 제고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목표 및 수단의 적절성	상	· 국정입법상황실 신설을 통해 국정기조를 입법 기획에 즉각 반영하는 체계를 구축함 · 입법계획 수립 조정, 추진상황 전수조사 및 모니터링, 주요 협의체 보고 등 정책 수단이 다양하고 적절함
2. 분석·의견수렴 충실성	상	· '24년도 주요 국회 심의지연 사례 등을 통해 주요 입법 장애 요인을 유형화하는 등 사례 분석 등의 노력이 돋보임
3. 추진일정의 적절성·충실성	중	· 추진일정의 구체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임
4. 상황변화 대응성	중	· 과제 특성상 모니터링 업무 많음, 여건 상황 변화 대처의 적시성 및 적절성 사례는 협조체계 또는 협업 사례로 볼 수 있음
5. 국민·관계기관 등과의 소통·협업 노력	상	· 상시적 협업체계 구축, 관계부처 협의체 보고 등 충실 · 관계부처 협의체 보고 34회 등 부처 간 이견 조정 노력 탁월
6. 성과지표 달성도	상	· 국정과제가 968건이라는 점, 46개 부처와의 협업, 광범위한 업무범위 등 고려 성과목표 달성 난이도 높음 · 협의체 보고건수는 성과지표로서 대표성이 낮음
7. 정책효과 발생 여부	상	· 국정과제 법령 117건 제·개정 완료, 민생, 경제법안 54건 조기이행 등 국정성과 창출에 핵심적으로 기여 · 법안 통과를 통한 국정 동력 확보 효과가 큼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적극적인 의원입법 법제지원 수요 발굴 노력으로 의원입법 지원 실적이 점진적 증가

* ('23년) 1,230건 → ('24년) 1,379건 → ('25년) 1,461건

- 입안 단계부터 정책의 조문화를 지원함으로써 의원입법으로 추진 되는 주요 정책 법안이 조기에 국회에 제출되고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입법지원 제공

* 법제처가 입법지원 제공 법률안 중 국회 통과(46건), 본회의 상정(11건), 법사위 심사(20건), 상임위 심사(406건)

- 특히, 국민주권정부 국정과제 법안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국정과제 법안 42건에 대한 전담팀 구성 및 집중 지원 실시

* 전담팀 지원 법률안 중 국회 통과(2건), 법사위 통과(5건), 법사위·상임위 심사 중(21건)

- 사회적 이슈가 된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입법지원을 통해 쟁점을 해소함으로써 소관 부처의 적극적인 국회 대응 지원

- 「법제업무 운영규정」 등 개정을 통해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지방정부의 의견 청취 의무화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입법 환경 변화에 따른 세밀한 분석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목표 및 수단의 적절성	하	·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정부 내 통일된 의견 마련 등 총괄 조정 및 입법 신속화에 기여 · 예비검토 및 실무협의회 등 수단은 타당하나, 국회 입법지원 기관과의 중복성 검토 보완 필요
2. 분석·의견수렴 충실성	중	· 입법 환경 변화에 따른 세밀한 분석 필요
3. 추진일정의 적절성·충실성	중	· 추진일정의 구체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임
4. 상황변화 대응성	중	· 국정과제 법안에 대한 전담팀 구성, 현안이슈 긴급 검토 대응 등 정책집행과정 모니터링과 적극적 대응이 돋보임
5. 국민·관계기관 등과의 소통·협업 노력	중	· 국회 상임위와 협업체제 구축 노력 우수
6. 성과지표 달성도	중	· 부처 협업 필요하고 다수 이해관계자 갈등 발생 소지 있음 등 고려 난이도가 높음
7. 정책효과 발생 여부	상	· 부처 간 이견을 사전에 해소하여 국회입법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 · 전년도 평가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여 검토 기준을 고도화함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국정과제, 규제혁신 등 중 주요 정책의 적기 시행을 위해 200여 개 법령안의 입안 및 법제화 추진을 차질 없이 뒷받침
 - 사회재난에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담고 있는 사회재난관리법안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주요정책의 법제화를 입안단계부터 적극 지원
- 신속하고 완성도 높은 입법이 필요한 국정과제 등 주요 정책 법령안에 대해 입안부터 심사·공포까지 쏠 과정을 촘촘하게 지원
 - * 우편물 배달업무의 탄력적 운영 방안을 담고 있는 우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등의 원스톱 지원을 통해 신속한 입법·시행 기여
 - ** 입법예고 기간 단축, 사전심사 등을 통해 입법예고부터 공포까지 21일 소요
- 입안지원을 받은 법령 중 총 51건의 법령이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입법예고 실시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성과지표 중 '법령입안지원 만족도'는 이미 목표치가 100%에 도달한 한계지표이며,
 - 측정산식이 법령입안지원 이용자가 만족도 조사 시 '매우만족' 또는 '만족'으로 응답한 비율로 되어 있어 구체성과 객관성이 다소 부족함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성과지표 변경 등을 통해 지표의 구체성 및 객관성 제고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목표 및 수단의 적절성	중	· 신속한 법제지원과 국정성과 조기 창출 기여 · 속도감있는 입법지원이라는 목표가 전략 목표와 긴밀하게 연계됨
2. 분석·의견수렴 충실성	중	· 입법 수요에 대한 분석이 다소 낙관적으로 이루어짐 · 중앙부처 담당자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함
3. 추진일정의 적절성·충실성	중	· 분기별 지원 계획 및 원스톱 입법 지원 TF 운영 일정이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되었고, 추진 일정을 계획대로 준수함
4. 상황변화 대응성	중	· 대면 상담과 원스톱 입법지원 등을 통해 적절히 대응함 · 모니터링은 체계적이나, 여건 상황변화 사례 미흡
5. 국민·관계기관 등과의 소통·협업 노력	상	· 법령입안지원, 서울법제지원센터 등 협조체제 구축과 주요 사례 공유 등 운영이 충실함
6. 성과지표 달성도	하	· 입안지원 실적과 입안지원 만족도는 지원 업무의 성과를 측정하기에 대표성이 충분함 · 성과지표 2의 측정항목의 구체성, 객관성이 부족함
7. 정책효과 발생 여부	중	· 만족도는 높으나 절대적 지원 규모를 확대하여 입법 성과 창출 기여도를 견인할 필요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법령해석을 요청한 민원인과 활발한 소통을 통해 불명확한 질의 요지를 법적 쟁점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정리하여 법령해석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민원인의 절차적 편의성 제고
- 일반 국민이 직접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는 기회 확대, 대면 참석이 어려운 경우 서면으로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절차적 공정성 및 신뢰도 제고
- 법령해석 안전 검토 과정에서 현장 의견청취를 통해 법령해석 결과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및 집행 현실 파악
 - * 감정평가사 및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관계자 현장간담회를 통해 실무 현황 등 확인
- 적극적 협의·조정처리를 통한 현안 해결 및 분쟁 조기 종료
 - * 협의·조정처리 건수: ('21년) 122건 → ('25년) 146건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성과관리 시행계획」상 '25년도 과제추진 계획이 연중으로 제시 되어 구체성이 다소 미흡
 - 성과 달성 과정에 대한 이행 및 점검이 어려워, 성과평가·관리의 실효성 저하 우려
- 성과지표 중 '법령해석 요청자의 의견청취 건수'는 수동적 지표라는 한계가 있으므로, 측정산식을 법제처가 주도하여 민원인의 의견을 청취한 건수로 변경하는 등 지표의 난이도 제고 필요

□ 개선보완 필요사항

- 「'26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수립 시 과제추진 계획 구체화
- 성과지표 측정산식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완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목표 및 수단의 적절성	중	· 적극해석 지침 운영 및 민원인 의견 청취 제도 등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이 구체적임 · 상위목표와 연계성이 있고 구체적이며, 이송제도, 법령해석 심의위원회 민원인 참석 등 다양한 정책수단 활용
2. 분석·의견수렴 충실성	하	· 법령해석 지연 및 규제적 해석 관행에 대한 분석은 적절하나, 개선효과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 · 설문조사 및 연찬회 실적을 제시하고 있으나, 의견반영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음
3. 추진일정의 적절성·충실성	중	· 추진 일정이 구체적이지 않고 연중으로 제시
4. 상황변화 대응성	하	· 신속처리안건 건수, AI 활용 건수 및 전년대비 증가율 등 구체적인 내용 보완 필요
5. 국민·관계기관 등과의 소통·협업 노력	중	· 부처 간 해석 이견이 있는 안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실무 협의를 진행하여 갈등을 완화함 · 법령정비 권고의견의 이행 상황 확인하는 방안 고려 필요
6. 성과지표 달성도	중	· 성과지표 중 적극해석건수는 타당하나 요청자 의견청취는 일방적 수동적 지표라는 한계가 있음 · 적극해석건수는 이해관계자 갈등 발생 등 난이도가 높으나 의견청취건수는 난이도가 낮음
7. 정책효과 발생 여부	중	· 신속처리안건 지정제도 등 전년도 자체평가결과 반영 충실. 다만, 적극해석결과 수용여부 조사 실시 주기, 결과수용 독려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재 필요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영업공간·인력기준 개선을 통해 소상공인 등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소상공인 등 소규모 사업자의 경영 안정·성장 지원
 -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50개 법령 공포·시행(12. 23.)
- 부담금, 사용료 등에 대한 분할납부 확대를 통해 소상공인 등의 금전 납부 부담을 완화하여 경영 여건 개선·활력 제고
 -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5개 법률안 국회 제출(12. 24.) 및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등 13개 법령 공포·시행(12. 30.)
- 청년이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 군 복무나 임신·출산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경제활동 여건 조성
 - * 「관세사법 시행령」 등 22개 법령 공포·시행(9. 30. 등)
- 채용 등에 있어 능력 있는 청각장애인 응시자들이 공정한 경쟁을 보장받아 사회참여의 기회 확대
 - * 「외무공무원임용령」 등 4개 법령 공포·시행(10. 10. 등)
- 학교 밖 청소년이 재학 중인 학생과 차별 없이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아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 진출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
 - * 「양자기술산업법」 등 9개 법률안 국회 제출(10. 1.) 및 「발명진흥법 시행령」 등 3개 법령 공포·시행(10. 10. 등)

☐ 개선보완 필요사항

-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국민생각함, 간담회 등에서 수렴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반영한 사례 등 제시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목표 및 수단의 적절성	중	· 민생안정 및 공정사회라는 국정기조와 전략 목표가 연계됨. 일괄 정비 방식을 도입하여 다수의 민생 법령을 정비하는 효율적 수단 확보 · 상위목표와 연계성이 있고 구체적이며, 단계별로 정책수단이 제시되고 있음
2. 분석·의견수렴 충실성	중	· 간담회 및 의견수렴 건수 외에 수렴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반영한 사례 보완 필요
3. 추진일정의 적절성·충실성	상	· 과제 발굴부터 확정까지 연간 도르맵이 구체적이며 집행 가능하게 설계됨
4. 상황변화 대응성	하	· 상시 모니터링과 소통강화, 사후관리를 통해 적절히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5. 국민·관계기관 등과의 소통·협업 노력	중	· 대국민 의견수렴의 적극성은 인정되나, 유관기관과의 협업 체계 구축에 대한 설명이 다소 추상적임
6. 성과지표 달성도	중	· 부처 간 이해관계가 얹힌 다수 법령을 정비하는 일의 난이도가 매우 높음
7. 정책효과 발생 여부	상	· 소상공인·청년 관련 법령정비를 통한 가시적, 즉각적, 구체적 정책효과가 기대됨 · 지난 평가의 개선 권고를 반영하여 고도화함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일반 국민의 실생활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혼란을 줄 수 있는 불합리한 규제 사전 차단
- 법리적 문제가 있는 행정규칙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법적 타당성·완결성 제고
- 긴급 현안, 다부처 협업 관련 행정규칙을 적시에 검토하여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 지원
-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주제* 선정 및 일괄 정비 추진
 - * ① 다자녀 가정에 대해 국공립 시설 주차요금·입장료·이용료 등 감면(12건 발굴)
 - ② 장애·나이 등에 대한 차별이나 부정적 편견을 줄 수 있는 규정(126건 발굴)
 - ③ 시대에 맞지 않는 관 중심, 중앙정부 우월적·권위적 규정(26건 발굴)
 - ④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자치권 침해 행정규칙(16건 발굴)
- 정비과제를 효율적으로 발굴하고 신속 정비를 추진하기 위하여 법제처 유관 부서와의 협업체계 공고화

☐ 개선보완 필요사항

- 법제처 내 부서 협조체계 외에,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체계화 필요
- 법제처 권고의견이 행정규칙 정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규칙 심사·정비 체계의 한계 개선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목표 및 수단의 적절성	상	· 사전검토와 사후심사를 병행하여 행정규칙의 품질을 관리하는 수단이 적절함
2. 분석·의견수렴 충실성	상	· 복잡한 행정규칙 구조에 대한 정확한 분석 실시
3. 추진일정의 적절성·충실성	중	· 추진일정의 구체성이 조금 부족
4. 상황변화 대응성	상	· 신산업 및 민생 관련 긴급 정비가 필요한 행정규칙을 우선 검토 대상으로 선정하여 유연하게 대응함 · 모니터링이 체계적이고 업무체계 개편 등 여건 상황 변화에 대응하려고 노력함
5. 국민·관계기관 등과의 소통·협업 노력	하	· 법제처 내 부서협조체제는 원만히 운영되는 것으로 보이고 대국민 홍보도 개선되었으나,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의 체계화는 여전히 미흡
6. 성과지표 달성도	상	· 규제사전검토 대안제시는 매우 어려운 과제이며, 아울러 행정규칙 개선과제 발굴도 어려운 과제임 · 부처 자율권이 강한 훈령 및 예규의 위법성을 지적하고 개선을 이끌어내는 등 난이도가 높음 · 장기적으로는 행정규칙 개선과제 ‘발굴’ 건수에서 행정규칙 개선과제 ‘확정’ 건수로 전환도 고려해 볼만 함
7. 정책효과 발생 여부	하	· 행정규칙심사·정비 체계의 한계로 상위목표 기여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임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신기술·신산업이 성장을 주도하는 혁신 경제를 위한 인공지능(AI) 대전환 법제 기반 마련 총력
 - 새 정부 국정과제의 적기 이행을 위해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의 입안 단계부터 민관정비단에 참여, 자문 등 법제 지원(총 27개 조문, 59건)
- 미래 기술이 산업구조는 물론, 사회구조 전반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법제 혁신 방안에 대한 선제적 연구 추진
- 규제특례사업 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중 ①인적 손해에 대한 청구권 및 ②그 청구권 행사로 전용계좌에 지급된 금원을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제샌드박스 법률 6개* 입법 지원
 - * 지역특구법, 모빌리티혁신법, 연구개발특구법, 정보통신융합법 등 6개 법률 국회 발의('25. 4.)
-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취업·영업 등의 진입장벽 개선을 위한 법령 전수조사 및 일괄 개정 법제 지원
 - * 기업의 인증 부담 완화를 위한 2건 법률 지원, 인력시설 기준 완화 21건 일괄 개정 추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사용 근로자도 '상시 근무'에 포함 되도록 총 23건 대통령령의 인적기준 정비

□ 개선보완 필요사항

- 과기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업이 우수하나, 대국민 홍보는 더욱 강화할 필요
- 미래 법제도 개선을 위한 과제 발굴 성과가 실제 입법 또는 제도 개선으로 이어진 사례를 더욱 명확히 제시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목표 및 수단의 적절성	하	· 선제적 로드맵 구축 및 규제샌드박스 지원 등 실효성 있는 수단을 확보함 · 입법 외의 수단(행정해석, 대응 가이드라인 등)도 검토 필요
2. 분석·의견수렴 충실성	중	· AI 기본법 시행령 마련, 행정기본법 개선 논의, 원스톱 협업 정비체계 구축 등 구체적인 정책과 제도 개선을 충실히 반영하고 의견수렴 결과가 명확히 이루어짐
3. 추진일정의 적절성·충실성	상	· 사회·기술 환경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법제 검토 방향을 조정하는 등 상황변화 대응 노력이 확인됨
4. 상황변화 대응성	상	· 새 정부 국정과제와 AI 등 신기술 이슈에 맞춰 우선순위를 신속 조정하고 입법지원·연구과제를 연계함
5. 국민·관계기관 등과의 소통·협업 노력	상	· 정책 추진에 필수적인 상시 협업체제를 구축·운영하였으며, 다양한 방식의 협업과 소통 실적을 충실히 달성하였다고 판단됨 · 과기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업이 우수하나, 대국민 홍보는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6. 성과지표 달성도	상	· 입법지원 건수 등은 과제의 핵심을 잘 나타내는 지표이며, 신산업 분야는 부처 간 이견이 많아 난이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목표치 대비 실적을 초과 달성하여 적극성 인정
7. 정책효과 발생 여부	중	· 신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으로 국가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기여함 · 개선과제 발굴 성과가 실제 입법 또는 제도 개선으로 이어진 비율을 더욱 명확히 제시할 필요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지방보조금 사업 등 지방정부의 지방재무사무의 자율성 확대를 위하여 총 72개 법령 정비
 -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22개 법률안 국회 제출 및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등 50개 법령 공포(3. 25.)
- 인구·환경 등 국가적 과제의 원활한 추진 및 지역주도 정책설계 지원을 위해 각종 정책의 논의·형성 단계부터 지방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정부위원회에 지방 추천자의 참여 근거 마련
 - * 「부담금관리 기본법」 등 22개 법률안 국회 발의 및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등 20개 법령 공포·시행(12. 23.)
- 지역의 법령정비 수요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직접 제안하고, 법제처가 법령 소관 부처와 함께 정비하는 창구 마련
- 자치법규와 관련된 법리적 쟁점에 대해 자문의견(268건) 및 상담 서비스(898건) 제공 등 맞춤형 자치법규 자문·상담 체계 운영
- 어린이를 보호하고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등 주민의 삶을 개선한 현행 자치법규를 분석해 입법모델 마련·지방정부 통보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지역 현장에서 제기되는 법령정비 수요를 중심으로 한 소통구조 강화 필요
- 지방의회의 입법발의 증가 등의 정량통계 분석도 병행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목표 및 수단의 적절성	중	· 지방분권 강화라는 상위 정책목표와의 연계성이 높고, 자치법규 정비 지원·컨설팅 등 정책 수단도 균형성장 측면에서 적절
2. 분석·의견수렴 충실성	중	· 지방자치단체 및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정책 설계가 이루어짐 · 지방의회 입법환경 변화와 자치법규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중장기 자치법제 지원 수요를 예측하는 등 정책효과 및 장단점 분석 결과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지만, 지방의회의 입법발의 증가 등의 정량통계 부족
3. 추진일정의 적절성·충실성	상	· 법령정비사업의 흐름에 맞게 추진일정을 구체적으로 수립, 지원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 운영일정을 맞춤형으로 수립함
4. 상황변화 대응성	상	· 법제전문가 간담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기초로 '법령정비제안 창구'를 마련하는 등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짐 · 지자체의 새로운 행정 수요에 맞춰 조례 정비 지원을 확대함
5. 국민·관계기관 등과의 소통·협업 노력	중	·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체계가 구축되어 있음 · 지자체와의 소통 채널(법제자문관 등) 운영이 우수함 · 국민과의 직접 소통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보완 필요
6. 성과지표 달성도	중	· 자치입법 역량 강화라는 과제의 핵심 목표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음 · 성과지표의 법령정비 건수·만족도는 한계에 도달하고 있으므로 정책 영향 범위(정책과급효과)가 확장되는 지표로 전환하는 논의 필요
7. 정책효과 발생 여부	상	· 위원회 지방참여 확대 및 지방재정 권한 관련 정비로 분권·자율성에 기여 · 자치법제 지원제도의 높은 수용률과 언론 보도 사례 등을 통해 객관적인 정책효과가 확인됨.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정확한 법령용어를 몰라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단어나 문장으로 법령을 찾아볼 수 있는 지능형 법령검색시스템 고도화('25. 12.)
 - 국민이 검색창에 입력한 질문에서 주요 키워드를 추출·범주를 나눈 후 법조문을 그림으로 찾아가는 AI 검색 서비스 도입
 - 검색한 결과에서 특정 법령과 관련된 상·하위 관계 또는 관련 법령을 한 화면에 제공함으로써 시각화된 법령검색 방법 제공
- *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 만족도 조사 결과: 만족 이상 83.7% 응답
- 시각장애인, 고령층 등 정보취약계층의 법령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해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적극 개선*한 결과, PC 웹 및 모바일 앱 접근성 품질인증 2년 연속 취득
 - * 법령에 포함된 별표·별지서식의 점자 변환, 약 8,000건 점자 전용 파일 제공 등
- 기관별 산재되어 있던 교육부 등 31개 기관의 법령해석과 특별행정심판 재결례, 지방세 판례 등 5만여 건의 정보를 AI 활용 및 데이터 친화적 형태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통합·제공
 - * 결정선례 개방 참여 중앙행정기관: ('22) 3개 → ('23) 5개 → ('24) 13개 → ('25) 44개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성과목표에 맞게 'AI 기반', '서비스의 혁신성'을 나타낼 수 있는 성과지표 제시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목표 및 수단의 적절성	상	· 국민 중심의 서비스로 혁신한다는 점에서 상위 성과목표와 전략목표와의 연계성이 명확하고, AI 기반 검색·제공이라는 지능형 법령검색 서비스 정책수단도 적절함
2. 분석·의견수렴 충실성	상	· 사용자 검색 패턴 분석 및 AI 기술 적용 효과 분석이 우수함 ·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의견수렴이 충실하게 진행됨 · 시각장애인이 포함된 모니터링단 운영 등을 통해 이용 시 불편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
3. 추진일정의 적절성·충실성	상	·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 고도화 구축 계획에 따라 추진일정을 수립하고, 단계별 추진계획에 따라 시스템 구축이 고도화됨
4. 상황변화 대응성	중	· 생성형 AI 기술 발전에 맞춰 서비스 고도화 방향을 적절히 조정함
5. 국민·관계기관 등과의 소통·협업 노력	상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시 다른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신속히 대처하고, 네이버 등 민간 리걸테크 업체 등에게 법령정보 통합 API 제공 서비스 신뢰성 확보 체제 구축함 · 다수 기관 데이터(해석례·재결례 등) 통합 제공으로 협업 기반을 확대
6. 성과지표 달성도	하	· 만족도 목표에 미세하게 미달하였으나, 공동활용 기관 수가 대폭 증가하여 전반적인 성과는 우수함 · 성과목표에 맞게 'AI 기반', '서비스의 혁신성'을 나타낼 수 있는 성과지표 제시 필요
7. 정책효과 발생 여부	상	· 법령데이터 허브 기능 강화(통합·API)로 국민·기업 활용성 제고에 기여 · 자체평가 지적(생성형 AI 반영) 대응으로 ISP 갱신 등 개선 조치 확인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저출생에 따른 인구감소와 초고령사회 진입 등 사회 변화에 대비하여 입양, 보호출산, 요양보호사 등의 주제로 신규 콘텐츠 제작 및 서비스 고도화(책자형 20건, 카드뉴스형 50건)
- 시민안전보험, 한부모가족 지원, 폭염피해 예방·지원 등 지역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조례정보 제공(7개 주제, 1,224건)
- 국내체류 외국인의 조기정착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창업지원, 외국인 강사 등 실생활에 활용도가 높은 생활법령 콘텐츠를 12개 외국어*로 번역·제공(600건)
 - *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일본어, 태국어, 몽골어, 인도네시아어, 네팔어, 아랍어, 우즈베크어, 캄보디아어, 방글라데시어
- 특히, 외국인이 생활 속 기본적 법규범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초적인 의무나 가족 제도 등 필수 사항 등을 담은 쉬운 콘텐츠를 외국인 눈높이에서 제공하기 위해 현재 제공 콘텐츠 전면 개편(360건)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성과지표인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일일 평균 페이지 뷰 수'의 경우 질적 이용을 반영하는 지표임을 강조하여 다음 연도에도 유지·확대되는 정책 요소가 무엇인지 제시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목표 및 수단의 적절성	중	· 상위 전략, 성과목표(법령정보 서비스 혁신) 달성을 위해 수요자 관점 에서, 국민과 국내 거주 외국인 · 이주민의 법 접근성을 제고하는 등 법 접근성을 높이도록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연계성이 명확하고 적절함
2. 분석 · 의견수렴 충실성	상	· 전문가 컨설팅 실시 결과를 성과계획에 반영하는 등 의견 수렴이 충실하게 진행됨 · 전년도 부진 사유(SWOT분석 미흡 등)를 심층 분석하여 개선안을 마련함
3. 추진일정의 적절성 · 충실성	상	· 콘텐츠 개발 · 홍보 · 교육을 연중 반복 운영하는 방식으로 일정이 현실적
4. 상황변화 대응성	중	· 대국민 설문조사(6월, 12월), 외국인 관련 유관기관 전문가 자문 통해 개선사항 발굴(2회), 외국어 콘텐츠 외국인 눈높이 개편, 업데이트 기간 단축 등 적절함
5. 국민 · 관계기관 등과의 소통 · 협업 노력	중	· 필수 · 상시 협업체계와 구체적 협업성과가 충족되며, 내용도 충실함
6. 성과지표 달성도	중	· 생활 현장 중심 법령정보 제공으로 법 이해 · 활용 증대에 기여. 이용 · 홍보 성과를 반영해 콘텐츠 · 채널 다변화(온라인 · SNS · 오프라인) 지속 필요 · 페이지 뷰의 경우 질적 이용을 반영하는 지표임을 강조하여 다음 연도에도 유지 · 확대되는 정책 요소가 무엇인지 제시 필요
7. 정책효과 발생 여부	중	· 카드뉴스, 퀴즈, 웹툰 등 재미있는 콘텐츠로 가공 원스톱 서비스 제공으로 국민들의 법 인식 제고 및 접근성 제고, 모바일 앱 서비스 제공으로 편의성 증대 등 사회통합에 기여 · 신속한 업데이트(주기 2개월→1개월) 및 '서비스 만족도'로 성과지표 개선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현행 법령 등 속 어려운 용어·문장을 알기 쉽게 정비함으로써 법령 접근성과 활용도 제고
 - 국민 일상생활 관련성, 국민 관심도 및 정비 효과성 등 고려, 사회복지 분야 17개 법령을 대상으로 어려운 문장 정비 추진, 최종 정비안 33건 마련
 - 대국민 파급효과·업계의 개정 요구 등 고려, 정비 효과 및 필요성이 큰 약관 등 112건 선별, 어려운 용어·문장 정비안 1,105건 마련
- 일상생활에 밀접한 법령 속 이해하기 어려운 조문의 내용을 그림 등 다양한 시각 콘텐츠로 개발·제공하여 국민의 법 이해도 제고
 - 국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재정·경제, 교육·학술, 국토개발·도시 및 주택, 환경, 소방 분야 81개 법령을 선정
 - 개별 조문의 특성에 맞게 그림·사진·절차도·표 등 다양한 형식 활용 및 QR코드, 웹툰 등 새로운 콘텐츠 형식 도입
 - 신규 콘텐츠 533건 국가법령정보센터 탑재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정책효과에 대한 분석이 「성과관리 시행계획」 수립 시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명확히 제시되지 않음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성과관리 시행계획」 수립 시 정책효과에 대한 분석 및 반영 결과 명확히 제시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목표 및 수단의 적절성	중	· 국민의 법 접근성 제고 및 법치주의 확산 달성에 있어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고, 정비대상과 개발과제를 명확하게 설정하여 정책 대상과 내용의 구체성이 확보된 적절한 정책목표임
2. 분석·의견수렴 충실성	하	· 정책효과 분석을 얼마나 계획에 반영했는지 불분명함
3. 추진일정의 적절성·충실성	상	· 대상 법령 선정→정비안 마련→콘텐츠 제작·검토의 절차가 비교적 표준화되어 있음
4. 상황변화 대응성	중	· 매월 한눈법령 콘텐츠 현행화 필요성 점검(개정 자동 알림 기능), 기존 콘텐츠 1,30여건에 대한 개선 필요성 전수 재점검 개선 필요 콘텐츠 61건 발굴
5. 국민·관계기관 등과의 소통·협업 노력	하	· 소관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정비안 수용률을 높이려는 노력이 돋보임 · 소관 부처 감수는 형식적 확인이 아니라, 각 부처가 실제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접수한 민원·질의를 기준으로 개발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콘텐츠 구성 자체를 변경하는 협업 방식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6. 성과지표 달성도	상	· 관리과제의 핵심 내용과 성과를 충실히 반영하는 대표성 있는 성과지표로 판단되며, 부처 협업·현장 의견·전문성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난이도가 있음
7. 정책효과 발생 여부	하	· 어려운 용어·문장 정비를 통해 법령문을 개선하여 법치주의 확산에 기여 · 만족도/수요조사 결과를 차년도 대상 법령·콘텐츠 기획에 재반영 필요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공직사회 헌법가치 함양을 위한 헌법교육 강화 추진

* 법제교육원·법제교육센터, 지방순회교육 및 맞춤형교육을 통해 총 2,783명 교육 수료

- 지방정부 공무원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의원, 정책지원관 등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법제교육을 실시, 지방자치단체의 양대 자치법규 입안 주체의 자치법제역량 강화 기여

* 기초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등 대상 법제교육 총 17회 실시, 총 935명 수료

- 법제교육시스템을 통해 교육과정 확인·신청, 수료증 발급까지 모든 교육운영의 전산화,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행정업무 대폭 개선, 수강신청 기능을 탑재한 모바일 버전으로 교육생 편의 증진

- 다문화가족 구성원 및 다문화센터 직원 대상으로 다문화가족 관련 '생활 속 알기 쉬운 법령정보*' 교육 실시, 총 17개 기관, 334명 수료

* 이혼·상속 등 가족 간 법률관계, 국적취득 등 국내정착, 출산·보육 등 자녀양육, 전세계약 등 부동산 관리 분야의 법령과 사례 소개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성과지표 중 '법제교육 참가자 연인원 수'는 집합교육과 온라인 교육의 난이도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 합산 방식으로 성과를 측정하고 있음

- 법제교육 참가자의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조사에 따라 접수된 보완·개선 의견 등과 해당 의견에 따른 개선 계획·내용 등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음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성과 측정 시 집합교육과 온라인 교육의 난이도 차이 반영 필요
- 법제교육 참가자의 만족도 조사 결과를 과정 편성·콘텐츠 개선에 반영하는 구조 마련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목표 및 수단의 적절성	중	· ‘법제로 만들어가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구현은 공무원의 법제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실시가 중요하고 맞춤형 법제교육 제공으로 상위목표와 연계성 높고, 그 대상이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어 적절함
2. 분석·의견수렴 충실성	하	· 정책효과 및 장단점 분석이 성과관리 시행계획에 충실히 반영됨 · AI 관련 과목 신설과 융복합 과정 신설은 현업 활용도에 대응하기 위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3. 추진일정의 적절성·충실성	상	· 연간 교육일정을 일 단위로 구체적으로 명시했으며, 계획된 일정 준수율은 100%임
4. 상황변화 대응성	중	· 교육과정 운영 전반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의 적절성을 확보함
5. 국민·관계기관 등과의 소통·협업 노력	하	· 국민·기관과의 연계 및 협조체계가 지속적으로 보완·강화되는 구조를 형성함. 다만, 지방순회교육 협업에 있어서 맞춤형에 대한 표현이 어떻게 과목구성과 기획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 필요
6. 성과지표 달성도	중	· 법제교육 참가자 연인원 수와 법제교육 참가자 만족도는 대표성을 갖는 지표로 판단됨. · 성과지표 중 ‘법제교육 참가자 연인원 수’는 집합교육과 온라인 교육의 난이도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 합산 방식으로 성과를 측정하고 있음
7. 정책효과 발생 여부	하	· 본 과제는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음 · 만족도·수요조사 결과를 과정 편성·콘텐츠 개선에 지속 반영하는 구조 필요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유관기관 협업 체계를 확장하여 '24년 4개에서 '25년 7개 산업 분야로 해외 법령정보 제공 범위 확대
 - * ('24년) 콘텐츠, 원자력, 의료, 화장품 → ('25년) 식품, 건설, 씨푸드 추가
- 해외 법령의 한글 번역본 제공(439건)
- 번역 법령의 세계법제정보센터 및 협업기관 플랫폼 공동 제공, 오픈 API로 연계·현행화하여 이용자 접근성 및 활용성 제고
- 법령번역 수요조사 서비스의 신청 대상자를 영세·중소기업 등으로 한정 및 집중 지원(762건)
 - 신속한 법령정보 제공(신청 후 5일 이내 해외 법령 원문 제공 등)으로 수출 및 해외진출 적시 지원(98건)
- 법령 번역본의 정확성·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감수 단계적 확대 및 현지 법률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 등 추진
 - * ('23년) 4개 언어권 → ('24년) 8개 언어권 → ('25년) 11개 언어권
- 법령 번역의 통일성·일관성 제고를 위해 「13개* 언어권별 법령 번역지침 및 용어」 발간
 - * '24년 11개에서 '25년 13개 언어권으로 대상 확대(튀르키예어, 포르투갈어 추가)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최근 AI를 활용한 번역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 점을 고려, 단순히 해외 법령의 번역량(총 한글 글자 수)을 기준으로 성과를 측정하는 것은 성과지표의 난이도가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임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성과지표의 난이도 제고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목표 및 수단의 적절성	중	· 수출 활성화 및 기업 지원이라는 국정과제와 직접 연계되며, 수요자 맞춤형 정보 제공 및 번역 지원 수단이 효과적임
2. 분석·의견수렴 충실성	중	· 수출 기업들의 법령정보 수요를 면밀히 분석했고, 기업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함
3. 추진일정의 적절성·충실성	중	· 번역 및 정보 제공 일정이 구체적이며, 계획 대비 제공 실적이 우수함 · 외부 변수(협업기관·자문위원·홍보 계약)를 고려한 현실성이 반영되지 않음
4. 상황변화 대응성	중	· 해외 규제·시장 변화에 맞춰 동향보고·맞춤형 정보 제공 등 대응 수단이 마련됨
5. 국민·관계기관 등과의 소통·협업 노력	중	· 정책 집행에 있어서 필수적·상시적 협업 구조를 전제로 설계·운영되고 있으며, 그 운영 결과가 구체적인 정책성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점에서 협업체계의 구축 및 운영이 충실함
6. 성과지표 달성도	하	· 맞춤형 번역 제공 실적은 기업 지원 성과를 직접적으로 나타냄 · 해외 법령 번역을 진행한 한글 글자 수의 경우 최근 AI 번역 등 활용을 통해 번역량 자체의 난이도는 높지 않다고 판단됨
7. 정책효과 발생 여부	중	· 수출기업의 규제 대응·시장진출 지원으로 경제활동 지원 목표에 기여 · 기업 수요·산업 협업 확대 계획을 바탕으로 서비스 고도화 지속 필요 · 해외 법령의 원문 및 번역 자료의 제공뿐만 아니라 수출기업 등에게 필요한 신속하고 정확한 맞춤형 해외 법제정보가 체계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AI 기반의 시스템 구축 고려 필요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대한민국 · 몽골 · 태국 · 캄보디아 총 4개국 법제기관이 양해각서 체결을 거쳐 ‘아시아 법제기관 협의체’ 공식 설립('25. 11.)
 - 공통 법제 현안에 대한 공동 연구 및 대응, 법제정책 · 법령정보 · 법제행정 분야의 교류 · 협력 수행
- 제13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성공적 개최
 - 총 9개국(중국, 일본, 태국 등) 법제 전문가 초청, 아시아 다수 국가의 디지털 법제 현황 공유 및 각종 쟁점 논의
 - ※ 주제: 인공지능 일상화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글로벌 사회의 디지털 경제 법제 현황 및 법제 발전 방향
- 법령정보시스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통해 수원국의 법치주의 확립 및 디지털 전환 지원
 - ※ '25년 총 4개국(네팔, 인도네시아, 베트남, 우즈베키스탄)에 대해 ODA사업 진행
- ODA 수요 · 분야 다각화를 위해 ODA 전략 수립 및 월드뱅크, UNDP 등 국제기구와 협력 방안 모색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참여국 중 개발도상국 비중 등 다양한 법제환경을 균형있게 반영하고,
- 협의체 참여 국가의 법체계 유형 분포, 즉 대륙법계, 영미법계 등 다양성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목표 및 수단의 적절성	상	· ‘세계로 나아가는 법제교류·협력을 강화한다’의 달성에 매우 부합,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 설립·운영 등 구체적인 방향성 명확하고 세계를 이끄는 경제강국으로 도약 등 국정 목표 달성에 기여 · ODA, 인적 교류, 양해각서 체결 등 수단이 다양함
2. 분석·의견수렴 충실성	상	· 정책 필요성 도출구조가 명확하고 현실적 분석수행을 한 것으로 판단됨 · 국제법제 전문가 등의 자문을 적절히 활용함
3. 추진일정의 적절성·충실성	상	· 일정의 구체성과 적절성이 충족되며, 대부분 정상추진으로 완료됨
4. 상황변화 대응성	상	· 상대기관 관심·협력도 편차를 고려해 다양한 국가/기관으로 교류를 분산 추진함
5. 국민·관계기관 등과의 소통·협업 노력	중	·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 공식 설립(1.7.), 법제 분야 연구 전문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과 협조체계를 구축, 온라인 생중계를 통한 의견 수렴 및 서면회의, 효과적·체계적인 ODA 수행을 위해 정부부처, 국제기구, 민간 등 다양한 주체와 협력
6. 성과지표 달성도	중	·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가 출범하는 성과를 이루었으며, 향후 참여 국가의 확대와 협의체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노력 필요
7. 정책효과 발생 여부	중	·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 설립 획기적, 상시적인 의사소통을 토대로 4개국에 ODA를 추진하며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 강화 ·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참여국 중 개도국 비중 등 다양한 법제환경을 균형있게 반영하고, 협의체 참여국가의 법 체계 유형 분포, 즉 대륙법계, 영미법계 등 다양성을 강구할 필요 있음

4. 자체평가결과 조치계획

관리과제 번호	관리과제별 개선보완 필요사항	조치계획(조치시한)
1	○ SWOT 분석 결과를 「성과관리 시행계획」 등에 충실히 반영 ○ 성과지표(통합입법예고시스템 제출의견 처리율)의 난이도 제고 필요	○ 법제처의 기관역량에 대한 분석으로서, 정부법제사무 총괄관장 기구로서의 강점(Strength)과 국회 및 각 부처 입법추진 노력 여하 등 큰 외부변수 존재라는 약점(Weakness), 정책환경에 대한 분석으로서, 정부입법 관련 범부처 차원의 통일적 정책 기조 필요성 유지 중대라는 기회(Opportunity)와 정부입법절차 회피 유인 등의 위협(Threat)을 분석하여 이에 부합하는 성과관리 수단을 마련하여 성과관리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 조치(‘26. 3.) ○ 통합입법예고시스템 제출의견 처리율 성과지표를 관리과제의 대표성을 보다 잘 나타낼 수 있고 성과 측정에 적합한 성과지표를 마련하여 난이도 상향(‘26. 3.)
4	○ 성과지표 변경 등을 통해 지표의 구체성 및 객관성 제고 필요	○ ‘법령입안지원 만족도’의 목표치 및 성과가 이미 한계치(100%)에 도달함에 따라, 법제지원 성과를 보다 효과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마련할 계획(‘26. 3.)
5	○ 「’26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수립 시 과제추진 계획 구체화 ○ 성과지표 측정산식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완	○ 성과관리 시행계획 과제추진 계획의 내용 및 그 일정을 구체적으로 수립(ex. 적극해석 추진상황의 분기별 점검: 3월까지)(‘26. 3.) ○ 성과관리 시행계획 수립 시 ‘법령해석 요청자의견청취 건수’ 지표 측정산식의 적극성 및 난이도 제고를 위한 방안 검토·반영(‘26. 3.)
12	○ 「성과관리 시행계획」 수립 시 정책효과에 대한 분석 및 반영 결과 명확히 제시	○ 신규 콘텐츠 선정 시 소관부처의 민원·질의 등을 기준으로 개발 수요를 확인받아 선정하고(‘26. 2.), - 콘텐츠 개발 단계에서 소관 부처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개발·조정(상시)
13	○ 성과 측정 시 집합 교육과 온라인 교육의 난이도 차이 반영 필요 ○ 법제교육 참가자의 만족도 조사 결과를 과정 편성·콘텐츠 개선에 반영하는 구조 마련	○ 집합교육과 온라인교육의 난이도 차이를 반영하여 각 교육 방식의 비중을 고려한 성과지표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음(‘26. 3.) ○ 과목, 강사 등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라 과목 구성 및 일정 등을 개선·조정하고 분기별 법제교육 결과보고서에 반영하겠음(‘26. 4.)
14	○ 성과지표[맞춤형 해외 법령 번역 제공 실적(총 한글 글자 수)]의 난이도 제고 필요	○ 기업의 해외 법령정보 수요에 대한 대응 노력을 반영할 수 있는 적절한 성과지표를 마련할 계획(‘26. 3.)